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소식지

물고기

1호
2013년 6월



반복되는 민영화 시도, 변장술에 속을 것인가
영리병원 반대만으로 의료민영화 저지는 가능할까?
통계로 보는 인천 : 실업률 1등, 고용률도 1등?
현장일기 : 파견업체에 떼인 돈 받는 그 날까지

목 차

발간사	물꼬를 트며	4
이슈와 입장	〈전국〉 반복되는 민영화 시도, 변장술에 속을 것인가	6
	〈인천〉 영리병원 반대만으로 의료민영화를 저지할 수 있을까?	13
사회진보연대가 만남 사람	학교의 유명에서 당당한 노동자로 우뚝서다!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인천지부 이윤희 지부장	20
분석	통계로 보는 인천 : 실업률 1위, 고용률도 1위?	27
회원칼럼	“불법이주자에게 우리기 빛지고 있는 것들” -영화〈WELCOME〉리뷰	34
현장일기	파견업체에 떼인 돈 받는 그 날까지...	38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활동소개	조합원에게 듣는 국민연금 오해와 진실 부평공단 근골격계 실태조사	43 49
내가 본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사회진보연대에 바란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인천건설지부 이병권 사무국장	53

물꼬를 트며

한재영 | 집행위원장

위기의 시대입니다. 자본주의의 위기를 구원하겠다고 지배세력이 해법으로 제시한 신자유주의는 실패했고, 장기 저성장시대에 돌입했습니다. 그로 인해 심화되는 착취, 빈곤, 차별로 민중들의 고통은 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보수적 위기관리를 위한 박근혜 정권의 등장과 연이은 노동자들의 자살, 온전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해 궁여지책으로 추진하는 시간제 일자리 정책, 재벌의 이윤을 벌충해주기 위해 추진되는 각종 민영화들, 슈퍼갑 대기업들의 횡포, 고조되는 전쟁위기 등으로 체제의 위기는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제의 위기가 양산하는 민중들의 불만을 담아서 권리로 만들어 가야 할 민주노총을 위시로 한 사회운동 역시 위기에 봉착해있습니다. 어느새 차이를 극복한 단결과 연대의 자리에는 무기력과 분열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운동이 대안세력으로써 정당성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냉정한 현실입니다. 인천지역 사회운동의 현실 역시 대동소이함에 공감할 것입니다.

“물꼬”를 트다는 것은 가뭄에 대비해서 눈에 가뒀둔 물을 도랑을 터 이

웃 눈에 흘러들어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나누고 교류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심화되는 체제의 위기, 운동의 위기 속에서 인천지역 사회운동에 필요한 것 역시 물꼬를 트는 일이 아닐까합니다. 서로 더 많이 교류하고 토론해서 공동의 실천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직면한 이중의 위기의 해법이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의 지난 활동을 돌아보며 조직 내외부적으로 자신의 활동을 좀 더 개방적으로 널리 알리고, 교류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은 없었나 반성을 해보며 새롭게 소식지를 발간합니다.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가 헌신하는 지역 동지들과 함께 인천지역 사회운동의 새로운 '물꼬'를 트고, 위기의 시대에 대안세력으로 성장해야 할 사회운동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비판을 기대합니다.

반복되는 민영화 시도, 변장술에 속을 것인가

| 정책위원회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 말기에 추진했으나 통과시키지는 못했던 몇몇 민영화 사안들은 고스란히 박근혜 정부에게로 넘어왔다. 영리병원 설립, 인천공항 민영화, 면세점 민영화, 수서발KTX민영화, 가스 직도입 허용 등이 그것이다. 당선 이후 상당히 신중한 행보를 보여 온 박근혜 정부는 최근 들어 공공부문 민영화를 위한 수순을 하나하나 밟으며 미뤄둔 '과제'들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

뒤집어진 약속, 국민적 합의와 철도발전

지난 5월 23일 국토교통부는 '철도 산업 민간 검토 위원회'의 이름으로 현재 검토 중인 철도 산업 개편 계획을 언론에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코레일을 지주회사로 하는 자회사가 수서발KTX의 운영권을 지니게 된다. 자회사의 지분은 코레일이 30% 미만으로 소유하고 나머지는 공공 연기금으로 채우는 안을 고려중이라 한다. 코레일의 지분이 30% 미만인 것은 공기업의 지분이 30% 이상일 경우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안은 그 동안 검토해 왔던 '제 2공사 건설'이나 '민간으로의 지분 매



각에 관한 비판을 요리조리 피해가기 위한 미봉책 혹은 단계적 민영화 정책에 불과하다. 공공 연기금으로 채워져 있는 정부 기금은 언제든지 매각 가능하며, 철도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문제의 본질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수서발KTX뿐만 아니라 충북선, 경북선, 영동선 등 기존 적자노선이나 신규로 건설하는 철도 노선들 역시 코레일과 분리된 자회사에 소속시키고 여기에는 민간 참여까지 가능하게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 모든 계획의 명분으로 들고 있는 것은 철도산업 독점 구조가 가져오는 폐해 극복을 위한 ‘경쟁 도입’이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허구적인 쟁점이다. 기본적으로 철도는 시민들이 선택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재화이다. 특정 시간, 특정 지역에 가는 노선은 독과점 형태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신규 사업자의 참여는 결국 '나눠먹기'가 된다. 철도는 건설비용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건설비용 부담이 없는 운영자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손쉽게 수익을 보장받는다. 예를 들어 보면, 건설비용이 19조에 매해 흑자가 3500억 선으로 예상되는 KTX의 운영권의 판매 금액은 현재 4500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민간사업자의 철도산업 참여에 재벌 특혜 논란이 빠지지 않는 이유다.

대체 경쟁은 어디에 도입되나? 새로운 사업자의 참여는 철도 산업 전반에서 임금 삭감, 인원 감축, 고용유연화를 통한 비용 절감 경쟁을 촉진할 것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둘러싼 사태에서처럼, 민영화 추진의 이면에는 반드시 '노동'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노동조건 하락은 당장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위험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이미 지속적인 인력 감축을 추진해 왔던 철도는 이로 인해 검수주기가 늘어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적 합의 없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철도 정책 추진 이전에 철도산업의 장기 비전을 먼저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로부터 반년도 채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 돌아보면, 당시 언급했던 ‘국민적 합의’는 정부의 입맛에 맞게 구성된 ‘민간위원회’에서의 졸속·밀실 논의로 대체되었다. 민간위원회가 철저히 국토부의 거수기 역할을 위해 꾸려진 것이라는 사실은 4명의 위원들이 ‘국토부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위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사퇴하면서 더욱 분명해졌다. 마찬가지로 ‘철도산업의 장기 비전 마련’이라는 과제는 철도산업을 갈기갈기 찢어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는 계획으로 귀결되었다. 노동자들과 박근혜 대통령은 같은 말을 하고 들으면서도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다. 박근혜 캠프가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노동자서민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나라라는 사실이 다시금 분명해지는 시점이다.

에너지 재벌의 성장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가스, 전력 등의 에너지 분야는 90년대 중반 이후 민간 부문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직접 매각 방식의 민영화가 추진되지는 못했다. 거세게 일던 반대 여론 때문이다. 대신에 민간사업자들에게 가스 직수입, 발전소 건설을 조금씩 허용해주는 방식으로 공공 부문의 영향력을 상대화 해왔다. 현재 민간발전 4대 메이저 기업은 포스코, SK, GS, 엠피씨 등으로 이들은 전력 뿐 아니라 가스 직수입 분야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다. 국내 천연가스 중 47%는 발전의 연료이기 때문에 발전회사와 가스 직수입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현대와 삼성까지 천연가스 직수입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는 판이다.

정부가 민간사업자들에게 천연가스 직수입의 길을 열어준 것에 더해 물량의 교환, 판매까지를 보장해주는 법 개정이 6월 임시 국회에 상정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10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4월 9일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천연가스 직수입기업은 “수급 안정 및 일정사유 발생 시 직수입자간, 해외, 가스 도매사업자에게 판매 가능”해진다. 개정 법안이 업자 간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기는 하나, ‘일정 사유 발생 시’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실제로는 에너지 재벌에게 천연가스 시장을 좌지우지할 공급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게 되리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민간자본은 철저히 수익의 논리에 맞추어 움직인다. 가스 가격이 싸면

대량으로 구입하지만, 비싸면 구입 양을 대폭 줄여 리스크를 모면한다. 반면 가스공사는 부족한 물량을 채워주고, 남은 물량을 처리해주며 국내 천연가스 전반의 수급안정 담당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2007년 국제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자 GS는 직수입을 포기하고 가스공사에 물량을 요청했다. 갑작스레 늘어난 GS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가스공사는 단기 스팟시장에서 비싼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당시 SK는 아예 3개월간 발전소 가동을 중단해 버렸다. SK의 발전중단으로 인해 다른 발전소는 가동률을 높여야 했다. 예상치 못했던 발전용 수요가 높아지자 도시가스 수요 부족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처럼 천연가스 직수입제도 개정안은 가스 공급을 철저히 재벌지배에 귀속되게 한다. 천연가스의 공공적 정책운용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가스공사가 천연가스 수급 불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들어가는 추가 비용은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기계약보다 단기계약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이다. 또한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가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수요가 민간 수입자 쪽으로 이탈하면 가스공사는 영업이익 유지를 위해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할 수밖에 없다. 이미 가스민영화가 추진되어 30여개 종합상사, 10여개 발전회사 및 도시가스회사가 가스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일본의 도시가스 요금은 평방미터당 2199원이다. 847원의 한국 도시가스 요금과 비교했을 때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치솟는 가스비에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에 떨어야 하는 저소득층일 것이 분명하다.

새로운 양상의 민영화 정책 추진에 맞서자



민영화 반대 운동이 성장하면서 정부는 점점 더 우회적, 단계적인 방식으로 공공부문에 민간사업자들의 참여를 보장해 왔다. 노무현 정부 시절 민간사업자의 가스 직수입을 허용해주었던 것, 외국인 학교, 영리병원 건설을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허용해주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명박 정부 역시 정권 초 한꺼번에 밀어붙였던 민영화 시도가 좌절된 이후에는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등으로 법안 개정 없이 교묘히 민영화를 추진하는 방법을 택하곤 했다. ‘선진화’, ‘경쟁체제 도입’과 같은 말장난이 시작된 것도 이 때이다.

박근혜 정부도 비슷한 전략을 택하고 있다. 분야별로 경쟁 도입, 위탁 운영, 규제 완화, 단계적 매각 등의 우회적인 방식의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며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는 것이다. 이명박이 일으켰던 것과 같은 소란을 최대한 피하며 조용히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임무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철도, 가스뿐만 아니라 의료, 상수도, 공항, 은행 등 다양한 분야의 민영화 정책이 선별적,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될 예정이다. 그러나 복잡해보일지라도 이들 사안의 본질은 정확히 같다. 중세 없는 복지재정 확대에 의한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정부가 공공부문에 대한 '포기'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공적인 영역들을 빠르게 잠식하는 것은 경쟁과 수익성의 논리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노동자 서민들의 몫으로 남겨질 것이다.

109개 단체로 구성된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은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를 집중투쟁주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동안 공공운수노조를 포함한 공동행동의 단체들은 출근 선전진, 주야간 선전진, 촛불집회, 토론회 등을 통해 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모아낼 계획이다. 민영화 저지 투쟁은 박근혜 정권과의 첫 싸움이다. 우리에게서 철도/가스/발전 노동조합의 공동 파업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계획에 제동을 걸었던 2002년의 기억, 몇 달간 지속적으로 촛불을 들어 집권 초의 이명박 정부를 식물 정부로 전락시켰던 2008년의 기억이 있다. 우회적, 기만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영화 정책들에 맞서는 투쟁은 분야별로 고립 분산되어서는 안 된다. 공동투쟁의 논리와 계기를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민중운동 전체가 이 투쟁을 힘차게 벌여 나가야 한다.

영리병원 반대만으로 의료민영화 저지는 가능할까?

- 인천의료관광재단과 인천시 의료정책의 모순 비판

한재영 | 집행위원장

인천시, 영리병원 반대입장이면 과연 충분한가?

노무현 정부시절 의료산업화라는 미명 하에 추진된 ‘영리병원’은 의료민영화의 첨병으로써 전국적으로 첨예한 쟁점이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고조된 영리병원 투쟁은 중앙정부, 인천시, 지역사회운동 사이에서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한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앞세워 영리병원 ‘조건부 찬성’을 내세웠던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 4월 4일 「인천시, 비영리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착수」 보도자료를 통해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천명하며 박근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상태이다.

현재 인천시가 영리병원을 두고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의료민영화의 다양한 시도에 대한 입장을 예단할 수는 없다. 영리병원 투쟁이 진행되는 동안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외환자 유치 허용, 외국인 유인·알선 허용 등 다양한 의료민영화 시도들이 중앙과 지역차원에서 이미 진행됐거나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영리병원 투쟁 주요

국면에서 인천시의 입장은 정세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인천시의 주요 의료산업정책인 인천의료관광재단의 합의를 살펴봄으로써 이후 인천에서의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전개 양상을 종합적으로 예측해볼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영리병원 ‘전투’를 넘어 의료민영화 ‘전쟁’에서의 승리이기 때문이다.

전국 최초로 출범한 인천의료관광재단의 출범 배경 및 사업방향



인천시가 주도하고, 길병원, 인하대병원 등 27개 의료기관과 인천관광공사 등 총 38개 기관이 참여한 인천의료관광재단은 인천광역시의회 조례 제정, 보건복지부 허가를 통해 2011년 8월 전국 최초로 출범했다. 출범식에서 송영길 시장은 “인천을 동북아의 의료관광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해외의료관광시장 개척에 주력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인천의료관광재단의 출범은 송영길 시장이 당선 이후 경제자유구역을 금융·의료·관

광 중심의 서비스산업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청사진의 결과였다.

인천의료관광재단이 시의회에 제출한 『2013 주요업무보고』에 따르면 ▲의료법 제27조에 근거한 외국인 환자 유치 촉진 ▲의료관광 상품개발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2013년 단일 주요사업인 ‘의료서비스 산업 글로벌화’를 위해 한 해 사업비의 절반을 전략시장별 특화마케팅 추진에 투입하고 있다. 즉, 의료관광 유치에 적합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외국인 환자유치를 확대해 지역경제발전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의료관광재단 출범 이후 2012년 해외환자 유치 실적은 2011년 4,000명(수익 약 6.9억원)에서 50%가량 증가한 6,000명(약 8.8억원)으로 추정되며, 2013년 8,000명(약 14억원), 2014년 14,000명(24억원) 그리고 2020년 10만명으로 야심찬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 5월 송도 재미동포타운 내 메디텔 지원 관련 업무협약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송도 메디텔은 외국인 전문클리닉 센터, 비즈니스 숙박시설(320실) 및 사우나, 피트니스, 상업시설,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이 포함되는 병원과 호텔이 결합한 의료관광시설이다. 인천의료관광재단은 “의료관광서비스 운영센터(가)”를 설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적극 호응했다. 이외에도 인천에는 서구 메디컬테마파크, 미단시티 헬스케어타운 등 다양한 의료관광 활성화 시설들이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다.

메디텔(meditel)이란?

‘의학(medicine)’과 ‘호텔(hotel)’의 합성어로 의료와 숙박시설을 겸한 건물을 지칭한다. 메디텔이 허용된다면 현행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의 비율이 전체 병상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상의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된다.

인천의료관광재단, 어떻게 봐야 하나?

의료상품화의 심화, 영리성이 강한 의료부문으로의 집중과 그로 인한 공공의료의 왜곡 등 해외에서 이미 발생한 의료관광의 일반적인 문제점들은 차치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산업을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건사하겠다는 인천시의 의료정책에 대한 여러 우려는 지울 수 없다. 왜냐면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천의료관광재단의 출범 배경 및 주요 사업이 의료민영화를 꾸준히 추진해온 중앙정부의 의료관광 활성화 법제도 개선 및 정책들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문제점은 인천의료관광재단의 출범 배경이 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다. 2009년 신설된 이 조항은 그동안 의료부문 공공성 보장을 위해 금지되었던 '영리를 위한 외국인 환자유치'를 허용함으로써 「2013 주요업무 계획」 에도 나오듯이 인천의료관광재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줬다.

두 번째는 인천의료관광재단의 향후 발전전망 및 효과를 규정할 '메디텔 허용',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유치'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시도들이다. 최근 창조경제 구축을 위한 규제철폐에 관련 법안들이 포함되면서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국회에서 논의되거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최근 다시 추진되고 있지만 사실 2000년대 중반부터 보건복지부가 줄기차게 추진해온 오래된 정책들이다. 정권은 짧고 관료는 길다.

의료민영화의 동력이 되는 지역의료관광 활성화 정책들

이러한 문제점들을 살펴보는 이유를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앙정부가 내세우는 의료관광 활성화의 주목적은 의료관광을 핑계로 국내 규제를 철폐하고, ‘의료산업화’라는 이름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허용된 ‘영리를 위한 외국인 환자 유치’와 앞으로 허용하려는 ‘민간보험사의 영리 목적 외국인 환자 유치’ 역시 내국인으로의 확대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성격이 짙다. 일단 외국인 대상 시설과 서비스를 허용하고 점차 자국 환자와 국내 규제 철폐로 이어지는 방식은 영리병원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익숙하기도 하다.

특히 6월 국회에서 ‘민간보험사의 영리 목적 외국인 환자 유치’가 통과되면 국민건강보험 당연징제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국인에 대해 의료기관과 직접 계약관계를 맺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민간보험사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상품을 팔고, 국내 의료기관과 각종 서비스에 대해 계약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민간보험자본의 오랜 숙원이자, 삼성생명 내부보고서에서 건강보험 해체로 가는 중간단계인 ‘민간보험-의료기관 직접적 연계망 형성’이 비록 외국인만 대상으로 하는 반쪽짜리이지만 한 단계 앞당겨지는 것이다. 게다가 ‘내국인-국민건강보험’의 예외사례로써 ‘외국인-민간보험’의 존재는 이후 내국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렇게 된다면 애초 영리병원이 목적으로 했던 민간보험 활성화와 이로 인해 고소득 계층이 국민건강보험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회를 우회해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메디텔 허용

은 '영리 추구 부대사업 범위 확장'과 '민간보험사-의료기관 직접계약 체계'로 가기 위한 방안이다. 이윤을 쫓는 병원을 만들기 위한 또 다른 방식인 것이다. 2009년 법개정으로 의료기관의 숙박업은 이미 허용된 상태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관광진흥법에 없는 메디텔 규정을 추가해 기존에 관광호텔 건축 시 필수공간이었던 컨벤션홀 등 공용시설 구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그리고 메디텔의 부대사업 범위를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제한해 술집, 도박장, 게임업소 등 학교보건법에 지정된 사행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설이 가능해진다. 그 동안 병원의 과도한 영리행위 추구를 제한해두었던 부대사업 영역이 우회로를 통해 대폭 풀리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정부가 개정하려는 시행령에는 메디텔을 개설할 수 있는 조건에 의료기관 뿐 아니라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를 추가하려 한다. 공교롭게도 앞서 언급한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과 맞물려 [민간보험회사→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메디텔 개설자]로 연결된다. 이제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은 메디텔을 매개로 외국인 환자 정보를 상호공유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보험을 개발하여 판매함으로써 소위 미국식 의료모델인 '보험회사-의료기관 직접계약'의 외국인 버전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인천에 들어선다는 메디텔, 의료관광타운 등의 소식이 반가울 수 없는 이유이다.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인천지역 사회운동의 자세

중앙정부의 정책에 종속된 인천시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메디텔 지원 등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들은 의료민영화의 동력이 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인천시의 '비영리 송도국제병원' 모델은 수익금을 밖으로 빼나가는



‘투재개방형’ 영리병원만 반대할 뿐 앞서 살펴 본 의료기관의 다양한 형태의 영리 추구행위들에 대해서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 취임 후 5월 들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부는 연거푸 송도를 의료 등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산업 허브’로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시 한 번 영리병원을 위시로 한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겠

다는 선전포고이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의료민영화 쓰나미에 맞서기 위해 인천지역 사회운동의 보다 냉철하고, 다각적인 분석과 투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학교의 유령에서 당당한 노동자로 우뚝 서다!

-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인천지부 이윤희 지부장

인터뷰/정리 : 유다해 | 조직국장

사회진보연대가 만난 첫 번째 사람!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오후, 조동초등학교 급식실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하루 일을 마친 쌤얼(!) 이윤희 지부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반가운 인사와 함께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 대한 개탄을 나누자니, '역시 지부장님은 지부장님인가보다'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10년을 일하셨다는 급식실에 앉아 도란도란 지부장님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시는 일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학교 급식실에서 밥 하는 일을 해요. 워낙 많은 밥을 하고 뜨거운 열기에 휩싸여서 일하다 보니 무거운 것도 많이 나르고 온 몸이 땀에 흠뻑 젖고 중노동이죠. 이 일을 시작한 건, 애 낳고 키우다가 애들이 크니까 할 일이 없네? 그래서 하나 더 낳았더니 또 가만 안 있고 크더라구요 (웃음) 그래서 시작하게 된 일이 벌써 이 학교에서만 10년이 됐네요. 조리선생님들은 대부분 10년 20년씩 일했어요. 그래도 애들 밥 한 끼 따뜻하게 먹



여서 보내는 일이잖아요. 옛날에 도시락 싸서 다닐 때처럼 좋은 반찬 안 좋은 반찬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닌 다 똑같은 밥, 굵은 친구들 없이 밥 먹 인다는 것이 큰 보람이자 자부심이에요.

지부장으로서 동서남북으로 쫓아다니면서 설명회하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에 가입시키고 있어요. 선생님들을 만나서 옆구리만 쿡 찌르면 이야기가 술술술 나와요. 내가 그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감도 잘 되고요. 그런 시간이 참 소중한 좋은 시간이에요. 업

무가 끝난 후에 그런 일하기가 힘들기도 하지만, 다른 간부 선생님들도 다 같이 하니까~힘든 줄 몰라요 ^^ 주말에는 호봉제 교육공무직 쟁취! 6022명 릴레이 단식 농성장에도 찾아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의 시작 ‘전회련’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3년 전 학교에서 무작정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도장을 찍으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2007년부터는 무기계약직이었기 때문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는데 왜 갑자기? 알고 보니 예전에 약속되어 있었던 처우개선을 하지 않겠다는 데 도장을 찍으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이준마들을 우습게 보아도 그렇지 이걸 너무하는 것 아닌가?! 안 그래도 쌓여있던 울분이 폭발했고, 그 길로 전회련 간담회에 참여하게 됐어요.

우리는 학교의 고립된 섬이에요, 섬!

사실 그 일이 아니라도 사람 취급 안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한번은 조동초등학교가 학교평가에서 1등을 한 일이 있었어요. 학교평가라는 것이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얼마나 공부를 잘 하는지 뿐만 아니라 위생적이고 건강한 식사도 포함되는지라 그야말로 쇠가 빠지게 청소하고 일했거든요? 그렇게 받은 상이라 같이 기뻐했는데, 상금 백만원으로 우리는 쪽 빼고 회식을 간 거예요! 물론 언제나 회식 때 열외였던 건 사실이지만 그때는 그게 그렇게 서럽고 분통이 터지던지. 조리실무원이 함께 가면 못 가겠다고 항의한 선생님 때문에 방학여행을 못 간 일도 있었어요. 일 시킬 때만 사람이고 다른 때엔 유령 취급하니 아예

상도 별도 주지 말라고 했죠.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매년 바뀌지만 정작 그 자리에서 묵묵히 10년 넘게 학교를 지켜온 우리는 학교의 고립된 섬이
에요, 섬!

최근에 있었던 일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급식실에 8명이서 일을 하는데, 1명만 빠져도 엄청나게 힘이 들거든요. 그러면 1명을 충원해야하는데 이걸 학교에서 안 해주고 저희가 알아서 다 구해야 해요. 그런데 힘들게 구해온 선생님한테 당일 아침에 성폭력진과가 있는지 여부를 서류로 떼 오라고 해서 떼 왔더니 시간이 지났다고 그냥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또 일주일 일한 선생님한테 한 달 넘게 돈을 안주기도 하고... 체불임금 이야기하려고 행정실 면담을 요청했더니, 시교육청에 직접 이야기하라네요. 교육청 직고용을 요구하는 걸 그런 식으로 비꼬는 거죠.

그래도 우리를 사람 대접 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바로 전교조 조합원 '차권호' 선생님! 모두가 유령취급 하던 우리에게 말 한마디 건네는 것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파업할 때도 와서 해준 응원의 한마디가 모두에게 너무 힘이 됐어요. 이제는 집회 때 만나면 반갑게 인사도 나누는 동지죠 동지! ^^

학교 비정규직 파업!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

겁도 많이 났고, 사실은 파업만큼은 안했으면 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해냈고, 아쉬움이 남기는 해도 엄청난 일을 해낸 거라고 생각해요. 급식실 선생님들이, 학교 비정규직이 파업이라는 걸 할꺼라고 누구든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무도 안 가보기는 했어도~ 가보니까 가볼 만 하더라구요?! 미약하나마 세상을 바꾸는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꼽아본다면?

좋은 점은 어쨌든 변화를 만들었다는 것! 파업 이후에 적은 액수나마 명절휴가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상여금을 받아요. 장기근속수당도 생겼고, 교통비, 자녀 학비 보조 수당, 가족 수당, 복지포인트 등이 생겼어요. 아주 큰 일은 아닐 수 있겠지만 단시간에 변화를 만들어냈고, 그게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했잖아요. 정말이지 엄청난 일을 해냈다고 생각해요.

처음 전화련에 가입했을 때 SBS기자에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고 제보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자가 한참을 듣더니 ‘학교 회계직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더 이상 이야기를 하기 싫어지더라구요. 근데 이제는 세상이 다 아는 문제가 되었죠.

안 좋은 점은 교육청 직원이나 교육감과 만날 때 생각보다 소통이 정말 안 된다는 것. 거기서 우리의 현실을 알았을 때 예전이면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마음에 상처로 남더라구요. 그리고 아직도 인천에 8천여 명의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 많은 분들이 노동조합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죠.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학창시절에는 어떤 학생이셨어요?

뭐.... 사회보고, 춤추고... 전교 오락부장... 그 정도? 깔깔깔

하하하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하고 싶은 게 참 많아요. 책도 많이 읽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싶고. 노조활동 시작하면서 시야도 넓어지고 그러다보니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지부장님이 본 사회진보연대는 어떤가요?

맘에 들어. 깔깔깔~ 만나면 반갑고. 처음엔 뭐하는 덴가 했는데. 말 그대로 '사회진보'를 위한 활동을 하는 곳, 이 사회처럼 딱 막힌 게 아닌 젊은 생각! 사회를 바꿔나가는 조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끝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깔깔

호탕하게 웃어제끼는 웃음에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가 많지만 즐겁고 힘차게 투쟁해나갔으면 좋겠네요. 학교비정규직 파이팅! ^^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는?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는 '전국회계직연합(전회련)'으로 출발하였다. 학교비정규직은 학교급식을 책임지는 영양사·조리사·조리원, 과학실험실의 숨은 일꾼인 과학실험실무원, 도서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사서, 학교 주요 공문 접수 및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교무·행정실무원, 장애 학생의 교육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실무원,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돌봄강사, 방과후 강사, 학교폭력예방과 정서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상담사 등 50여개 직종에 전국적으로 20만 명에 이르고 인천에는 8천여 명이 있다. 20년 전부터 '일용잡급직'으로 존재하다가, 이제는 학교회계에서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학교회계직'이라 불린다. 교사, 공무원과 달리 호봉이 인정되지 않아 1년 일한 사람이나 10년 일한 사람이나 같은 월급을 받는 문제 때문에 교육 공무원, 호봉제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여의도에서 '밥값도 못 받는 학교 비정규직 6,022명 릴레이 단식'을 하고 있고, 인천에서는 차별 없는 학교, 평등한 학교 행복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통계로 본 인천

: 실업률 1등, 고용률도 1등?

한재영 | 집행위원장

첫 번째 「통계로 보는 인천」에서는 '고용통계'를 중심으로 인천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용통계 중 가장 먼저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실업률'일 것입니다. 실업률은 노동자들에게 생계가 걸린 일자리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경제학적으로도 경제위기 회복을 가늠하는 실물경제 지표로써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기 때문이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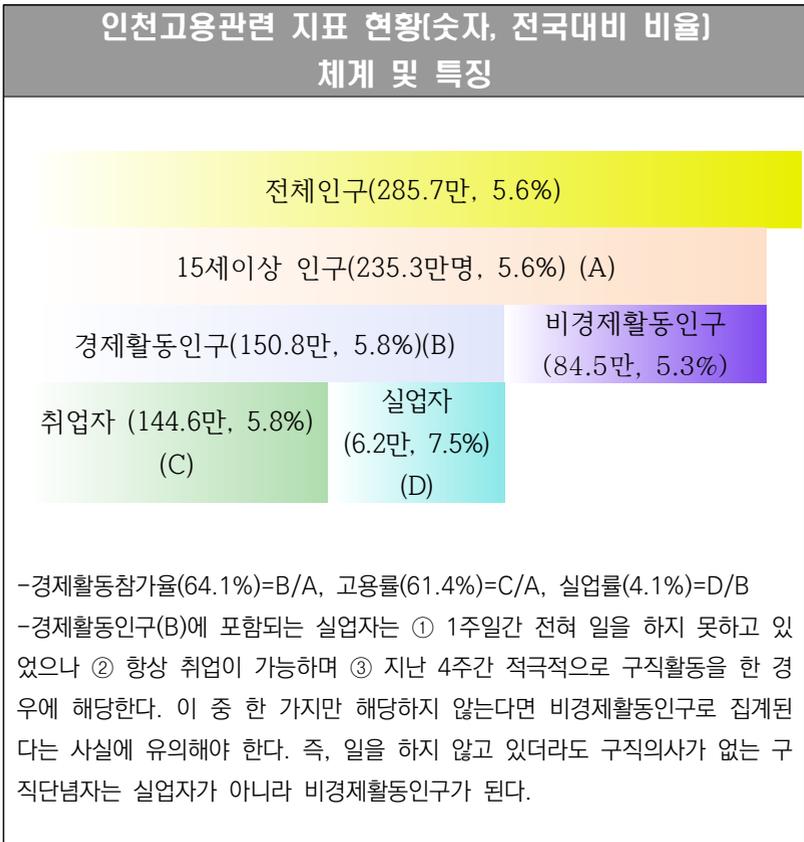
| 분석 |

인천은 2013년 들어 실업과 관련해 안타까운 신기록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업자 규모는 올 해 1월 8.6만 명을 기록하면서 10년 5개월 만에 다시 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실업률 역시 6%를 넘어서며 2000년 3월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인천은 지난 10년 간 평균 실업률(2003-2012)에서도 4.89%를 기록함으로써 결국 7개 특·광역시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말았습니다(전국 평균 실업률은 3.81%). 특이한 점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 격차가 0.66% 더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10년 넘게 1위를 놓칠 줄 모르는 인천 실업률 고공행진의 주요 원인은 '취약한 고용안정성'입니다. 대표적으로 2012년 인천지역 임시직 비중은 24.8%로 7대 특·광역시 평균 22.6%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불행히도 최근 10년 동안 7대 특·광역시 중 또 1위입니다. 임시직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성이 낮은

임시직 비중이 높다는 것은 실업 가능성이 높은 취업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2008년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실업률 격차가 기존 격차보다 더 벌어진 이유도 고용안정성이 취약한 임시직 일자리들이 더 많이 없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양상은 1997년 외환위기와 유사한 패턴이고, 2003년 이후 정규직을 앞지른 비정규직 비율은 2012년 현재까지도 52.5%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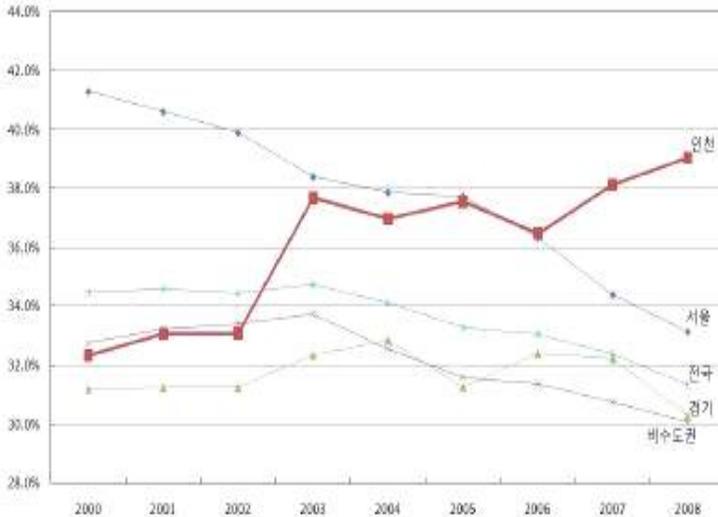


| 분석 |

그런데 실업률이 낮으면 무조건 경제상황이 좋은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80년대 보수당 대치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해 극심한 경기침체를 경험했던 영국 북부 광산지역의 경우입니다. 이 지역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들어 오히려 실업률이 감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을 찾는 실업자 중 일부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직업을 찾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구직단념자가 늘어나면서 실업률(자)가 감소했지만 경기침체는 그대로였던 것이지요. 또한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노동자들이 '이주'하면서 일자리, 취업자가 늘지 않았지만 실업률(자)가 줄기도 했습니다 즉, 실업률은 구직단념자 증가, 이주 등 다양한 노동력공급 측면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때문에 실업률이 놓치는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완통계들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박근혜 정부가 70%가 목표라며 자주 언급하고 있는 '고용률'입니다.

고용률은 구직단념자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취업자의 규모'를 반영하며 고용의 '양'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고용의 '질'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천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13년 4월 현재 61.4%로 7개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은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는 인천의 지표는 임시직 비중이 높은 인천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률 수치상으로는 일자리와 취업자가 많아 지역경제가 활성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인천시민들의 삶이 꺾어진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되듯이 인천의 고용률 향상이 90년대 말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임시직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임시직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임시직 비율은 임금근로자에서 임시직이 차지하는 비중임.

높은 실업률과 높지만 질이 떨어지는 고용률을 동시에 보유한 인천에서는 일자리 수급간 불일치(mismatch)가 주요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09년 상반기 인력부족률 조사에 따르면 인천은 2.4%를 기록하며 7개 특·광역시 중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일자리도 많고, 일을 구하는 사람도 많은데 기업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아이러니한 사태는 왜 지속되는 걸까요? 저임금 장시간 불안정 일자리를 원하는 기업과 그보다 나은 일자리를 구하려는 구직자 사이에 불일치, 간극이 조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지역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83시간으로 전국(179시간)보다 길게 나타났으며, 임금은 251만원으로 전국(262만원)보

| 분석 |

다 적게 나타났습니다.

	2008(상반기)		2008(하반기)		2009(상반기)	
	부족인 원	부족률	부족인 원	부족률	부족인 원	부족률
인천	16,179	4.1	12,733	3.2	10,133	2.4
서울	52,722	2.3	49,269	2.0	50,614	2.0
경기	73,974	4.3	48,510	2.9	45,259	2.5
울산	3,237	1.4	2,714	1.1	2,606	1.0
∴	∴	∴	∴	∴	∴	∴
전국	225,972	2.8	171,962	2.1	179,906	2.1

자료: 노동부, 사업체 고용동향 특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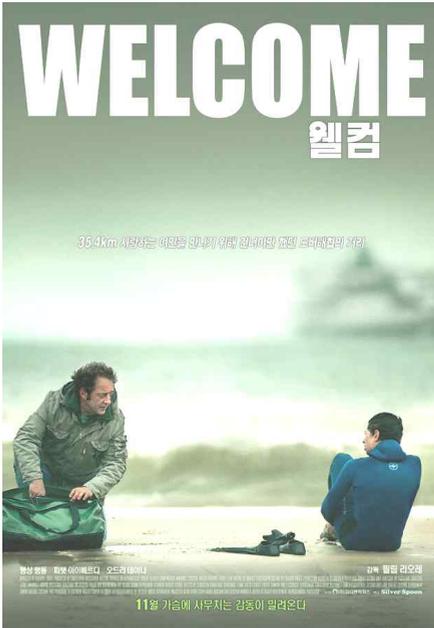
주: 전국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 인력부족률은 현재 종사자수에 대한 부족인원 비정

또한 2007년 한국노동연구원 광역시별 통근권 구조 비교에 따르면 타지역으로 통근하는 인천 노동자의 비중은 23.9%(경기로 12.4%, 서울로 9.6% 등)로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반면, 타지역에서 인천으로 통근하는 노동자들의 비중은 3.3%(경기에서 1.6%, 서울에서 0.7% 등)로 가장 낮습니다. 이는 인천 거주 취업자로 등록된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통근하는 비중이 반대보다 더 큰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인천의 고용현실은 고용률, 실업률 지표가 나타내는 것보다 더욱 비관적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분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높은 고용률'에는 지역 내 일자리가 많다는 뜻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용지표보다 인천현실이 확실히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인천지역 실업률과 고용률의 실제 속사정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인천지역 고용현실이 '속이 빈 강정'과 같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이 빈 인천의 고용을 따뜻하고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인천의 자본가들이나 주류 학계가 앵무새처럼 짊어대는 '규제 완화'나 '노동유연성 확대'일까요? 아니면 인천시가 시행하고 있는 무성의한 생색내기 무기계약전환이나 생존률이 극히 낮은 자영업 창업일까요? 이 글을 보는 여러분은 아마 이미 답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정답은 바로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고용안정,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단결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름길은 노조를 조직하는 것이겠지요. 자기 자신보다 자기 권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을테니까요. 인천 136만 노동자 중 민주노총 조합원은 3만에 불과하고 조직률은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97.8%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위해 단결하면서 높은 실업률과 일자리 수급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운동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불법이주자들에게 우리가 빚지고 있는 것들”

- 영화 <웰컴 WELCOME> 리뷰



영화 <웰컴>이 만들어진 2009년보다 열 두해 전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에티엔 발리바르는 영화인들의 공동작업에 의해 조직된 <쌍베르나르(Saint-Bernard)의 불법이주자들에 헌사된 회합에서 <불법이주자들에게 우리가 빚지고 있는 것>이란 제목의 글을 낭독했다. 이 영화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유럽의 참혹한 현실이 만드는 비극을 담담

하게 그리며 우리 시대의 피할 수 없는 진실의 몇 가지 항목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어쩌면 이 영화는 발리바르의 낭독에 대한 화답일는지도 모른다.

1.

우리는 불법이주자들로 인해 “대립들, 문제에 대한 사실들로 인해 ‘이 세계’의 문제를 직시”할 수 있게 되었다. 영화에서 수영강사 시몬이 이혼 직전의 위기에 처한 고독한 중년 남자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는 한 불편한 계기가 열일곱살의 쿠르드족 불법이주민 소년 비랄로부터 제기된다. 소년이 트럭 짐칸 안에 숨어 영국으로 가는 것에 실패하자 오로지 헤엄을 쳐서 영국으로 건너가겠다는 무모한 결의로 수영장을 찾은 것이다. 시몬은 신경질적으로 “내 삶에 끼어들지 말라”고 반응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점점 이 쿠르드족 소년의 삶에 끼어든다.

처음에는 비랄의 그 어떤 행동과 결의도 시몬에게는 납득 불가능하다. 왜 수영도 못하는 이 소년은 죽음에 처할지 모르는 모험을 감수하려고 하는가? 비랄의 이유는 단순하다. 도버해협 건너에 이라크 모술에서 헤어진 연인 미나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 시몬은 몇 차례에 걸쳐 “너는 도버해협을 절대 건널 수 없어. 거기는 수온이 10도도 되지 않고 몇몇 위대한 선수들만이 겨우 해낸 곳이야. 게다가 파도는 얼마나 센데!”라며 말리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미나를 만나고자 하는 비랄을 설득하지 못한다. 그리고 결국 시몬이 비랄에게 고가의 잠수복을 주는 그 순간, “교통들의 방벽”이 무너지는 순간이 도래하는 것이다.

2.

“불법이주자들은 자신의 불법성에 대한 관리가 국가에 의해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창출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영화에서 드러나는 예심판사, 경찰, 행정당국의 위선적 행태들을 보라.

그들은 원천적인 '연대'의 윤리가 작동하게 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우연적이면서도 필연적으로 고독한 반역자가 되어버린 시몬과 비탈은, "제도적 인종주의의 연장의 주요한 메커니즘"을 폭로하는 저항자들이 되어버렸다. 그들이 감행하는 '위험한 도박'이 바로 이 제도들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최초의' 도전일 게다. 반대로 영화 속에서 지고지순하게 배식 자원봉사를 하던 시민활동가들의 행위는 얼마나 쉽게 체제 내적인 것으로 수렴되었는가?

칼레에서 시민들이 나서서 불법이주자들을 돕는 것은 '불법행위'이다. 비가 오고 날이 추워 차에 태워주는 것조차, 잘 곳이 없는 그들을 위해 잠 잘 곳을 제공해주는 것조차 '불법' 항목에 속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 고독한 시몬은 점점 법의 경계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시몬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법 외에도 하나 더 있다. 시몬이 사는 아파트의 여러 이웃들, 전 부인, 이주자들을 위해 배식 자원봉사를 하는 남자까지, 시몬에게 비탈을 채워주는 것은 그만되어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상태 자체가말로 진정한 '고독'처럼 느껴진다. 동일성을 지니고 있다고 취급되었던, 또는 때때로 항상 시몬의 '무관심'을 힐난하기도 했던 자원활동가들마저 "위험하니까 그만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고, 시몬은 이데올로기 앞에서 보다 더 고독의 나락으로 추락하게 된다.

3.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빛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서 시민권을 재창조했습니다. 시민권이 하나의 제도나 지위가 아니라 집단적인 실천인 한에서 말입니다."

비탈이 감행하는 모험은 현실의 불가역적인 상황, 제도의 위협과 경찰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온 몸으로 실천하는 행위이다. 제도에 의해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승인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 거주할 권리, 그리고 '사랑할 권리'마저 쟁취해낼 모험을 감행한 것이다. 그 모험이 죽음과 그리 멀리 떨어져있기 힘들다는 것을 그 역시 힘겹게 인정했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국 그가 보여준 도전이 영화에서는 이 시대 지배계급의 공고한 국경의 붕괴를 드러낸다.

영화 마지막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호날두의 경기 생중계 장면은 참으로 기이한 인상을 안겨준다. 호날두의 골인, 비탈이 꿈꾸었던 '미래'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던 호날두와 맨체스터유나이티드, 그리고 유럽을 휘감고 있는 열광적인 축구 열풍이 이 세계의 아무 행복도 보장해주거나 회복시켜줄 수 없음을 도리어 우리의 현실에서 도피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시니컬하게 되묻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관에서 나왔을 때 맞이한 밤공기는 도버해협이 살을 에는 추위처럼 느껴졌다. 그런 공명의 순간에 우리는 세계의 불법이주자들과 마주할 수 있는 걸까? 칼레의 시민들이 불법이주자들을 "환영한다welcome"고 말하면서 동시에 환영하지 않았던 슬픈 사태 이후에 도래한 '이 영화'에 의해서 우리는 불법이주자들에게 톡톡히 빛을 진 사람으로서, 도리어 저들 불법이주자들에게 "환영(welcome)"받았음을 느꼈다.

※ 영화를 보고 싶은 분은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에 문의하세요!

(☎032-431-7763/ ✉icpssp@jinbo.net)

파견업체에 떼인 돈 받는 그 날까지...

김서형 | 공단노동자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다. 눈 깜빡하면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우리에게만 서로 얼굴보고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쉬는 시간이면 너도나도 폭풍같은 대화를 주고받는다. 진희가 나에게 와서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언니, 명숙이랑 부진이가 여기 들어오기 전 회사가 부도나서 퇴직금을 못 받았데. 몇 개월이나 기다렸는데도 회사 어렵다고 아웃소싱에서 미루고 있나봐.”

인천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 소개도 시켜줄 겸, 부진이와 명숙이에게 자세한 얘기도 들을 겸, 잔업이 일찍 끝나는 날 식당에서 모두 만나기로 했다. 쭈뼛쭈뼛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고.....맥주를 시켰다.

퇴직금 바로 받고 싶으면 50%만, 아니면 8개월 분할지급!?

아웃소싱을 통해 들어간 한 회사. 300여명이 일하는 큰 회사이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부도신청을 했다는 소문이 돌고 곧 회사는 문을 닫았다. 부진이와 명숙이는 1년 넘게 일을 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회사를 나오게 되었다. 회사사정을 알고 있던 터라 아웃소싱에서 계속 퇴직금 지급을 미뤘지만 재촉하지 못했다. 몇 개월이 지나고 퇴직금을 요구하자 아웃소싱에서는 말도 안되는 선택지를 주었다. ‘바로 받고 싶다면 퇴직금의 50%를 받던가, 퇴직금을 100% 받고 싶다면 8개월 분할지급’. 회사가 부도나도 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었지만, 아웃소싱에 구걸하듯 받아내야 하는 돈이었다니...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우리에게 200여만원의 퇴직금은 결코 작은 돈도 아니고, 몸뚱아리 팔아 번 피 같은 돈을 그냥 날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상담이 끝날 무렵, 두 가지 해결방법이 나왔다. 첫째, 아웃소싱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단과 함께 찾아가 항의한다. 둘째, 첫 번째 방법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노동부에 신고하고 법적으로 해결한다. 부진이와 명숙이는 우선 아웃소싱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아웃소싱이 그간 ‘회사가 부도나서 어려워니 마음은 챙겨주고 싶지만 힘들다’고 했던 말을 믿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웃소싱은 4개월 더 기다려 준다는 부진이와 명숙이의 제안을 거절하고 퇴직금 50%나 8개월 분할지급을 고수했다. 결국 부진이와 명숙이는 사업단과 함께 주소와 회사명까지 바꿔버린 아웃소싱에 찾아가서 맞섰다. 당황하는 아웃소싱직원과 당당하게 얘기하는 부진이와 명숙이. 아웃소싱과 맞선지 4일 만에 부진이와 명숙이, 사업단은 퇴직금을 받아냈다!

“와! 언니! 나 퇴직금 받았어요!”

우리 중 제일 나이 많은 언니가 공단에서 굴러먹은 짬밥(?)이 묻어나는 말을 했다.

“잘했다! 거봐. 개네 힘든 거 다 거짓말이다. 돈 달라고 찾아가니 얼굴 싹 바뀌지? 부도난 건 원청회사고, 지들은 그 회사 말고도 딴 데도 사람



▲ 공단주변에 난립하는 파견업체들

팔아먹는 아웃소싱인데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돼? 지들이 부도났대? 사람 장사하는 인간들 가만히 앉아서 사람 팔아먹고 우리가 일한 돈 따박따박 떼어가는 인간들이 왜 돈이 없대! 그리고 니가 뭘 잘못해서 니 몸덹이 팔아서 일한 돈 당당하게 달라고 못하고 부탁을 하니! 잘했다, 잘했어. 그런 것들 쓸데없는 소리하면 입을 찢어놔야 돼.”

노동자들의 몸에 투명 빨대를 꼽아놓은 파견업체들

그렇다. 파견업체는 사람 장사하는 놈들이다. 가만히 앉아서 일자리 구하러 온 사람들 데려다 회사에 꽂아놓고 따박따박 돈 떼어간다. 일 구하기 전에는 온갖 착한 척, 챙겨주는 척 다하고 뒤로는 내 몸덹이 팔아 번 피 같은 돈 떼어간다. 가끔씩 찾아와 ‘아이고~ 우리 에이스~ 잔업특근 많

이 해서 돈 많이 벌고 대박나세요~!’ 한다.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대박나라는 말이 그저 격려 인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월급의 비율로 돈 떼어가는 파견업체에게 더 많은 잔업, 특근은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하는 길이다. 부진이랑 명숙이는 그래도 퇴직금 나오는 파견업체에서 일했었지, 지금은 그런 업체도 드물다(그렇다고 부진이와 명숙이가 업체 잘 만나 호강한다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교묘한 수법들은 날이 갈수록 파견업체 사이에 퍼져 결국 우리에게 더 나쁜 결과로 다가온다. 비단 일 해놓고 퇴직금 못 받은 사람이 부진이와 명숙이 뿐만이 아닐 것이다. 공단에서 파견직으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1년이 되기 전 업체 변경해서 퇴직금 못 받고, 마음대로 연차 못 쓰고 연차수당도 못 받고, 마음에 안 드는 회사 3일만에 퇴사했다가 3일 치 일당 떼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 ‘사건’이 없는 것 같아도 파견직은 이미 매일 파견업체에 피 같은 돈을 떼이고 있다. 한 여름 모기 퇴치용 ‘에프킬라’처럼 노동자들의 피 같은 돈을 빨아가는 파견업체를 잡을 파견킬러가 필요하다. 파견업체 돈 떼인 것 받아내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잘 버티자!

노동자들 고향로 배 채우는 파견업체의 행태들

▶ 퇴직금 안주려고 1년이 되기 전 주기적으로 업체명과 대표를 변경하는 업체는 기본.

↳ 업체명 바꿔놓고 말도 안 해준다. 처음에 가르쳐준 회사 주소로 한번 찾아가 보라. 이미 이사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한 회사에 다니면서 1년 8개월 동안 업체를 5군데나 다녔다. 입사 하면서 A업체, 6개월 지나 B업체, B업체가 명의변경해서 C업체로 이동했다가, 그동안 6개월 채워져서 D업체(옮겨 다니던 사이 A업체가 D업체로 명의 변경), D업체가 명의변경해서 E업체. 그리고는 파견업체계의 VIP가 되었었지. 훗-_-;;

▶ 파견업체가 소개해준 회사에 3일만 일하고 퇴사해도 일당을 줬지만, 이제 5일 이상 일해야.

↳ 일정기간 안에 퇴사한 경우, 업체도 발품을 팔았다면서 일당지급 안한다. 파견업체 발품값의 하향 평준화.

▶ 퇴직금 안주려고 문지도 따지지도 않고 업체끼리 사람 바꿔치기도.

↳ 입사할 때 **업체, 6개월 지나면 &&업체. 6개월 되는 날 **업체 사직서와 &&업체 입사지원서를 동시에 가져오는 센스. 일타 쌍피.

“국민연금 조합원에게 듣는 국민 연금의 오해와 진실”

|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공개워크숍

지난 5월 22일 수요일 19시 국민연금지부 부평계양분회 회의실에서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전체회원모임 겸 공개워크숍으로 《국민연금 조합원에게 듣는 국민연금의 오해와 진실》을 진행했다. 당일 행사에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회원 및 국민연금지부 경인지회 조합원을 비롯해 금속, 공공 등 지역의 산별노조와 진보정당, 사회단체 회원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고 강의를 들으면서 평소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고 향후 국민연금 개혁에 맞선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국민연금은 떼인 돈? 국민연금은 동네북?

워크숍은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먼저 진행된 ‘키워드로 보는 국민연금’에서는 4-5명씩 조를 나눠 일상 속에서 느꼈던 국민연금에 대한 생각들을 키워드로 정리하고 서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속에서 평소 국민연금에 대해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최소 10년은 더 납입해야 하는데 그때가서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을 가진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떼인 돈’, 왜곡된 정보를 알고 국민연금에 격하게 항의하

는 민원인들을 자주 상대하는 국민연금 조합원들은 '동네북' 같은 키워드들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했다.



▲ '키워드로 보는 국민연금' 토론 및 발표 중인 참가자들

안정성, 보장성, 소득재분배성이 강한 국민연금의 진실

토론을 마치고, 이어서 국민연금 경인지회 민원진 조직국장님의 강의를 진행됐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지기 때문에 민간보험 보다 안정성이

높고, 민간보험에 비해 마케팅 비용, 임금 등 관리운영비가 적기 때문에 보장성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언론에서 가장 부각시키고 있는 기금고갈은 이미 설계 시점부터 예정된 수순이며, 10일치 기금만 쌓아놓고 필요한 만큼 건어서 연금을 지급하는 독일과 같은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국민연금의 오해를 푸는데 중요한 내용이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은 설계구조가 세대 내/세대 간 소득재분배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노후가 불안정한 서민들을 위해 필요한 제도임을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다.

또 다시 불어 닥칠 국민연금 개악에 맞선 투쟁을 준비하자!

☆☆광고☆☆

함께 해요!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를 위한 캠페인!

일시 및 장소: 6월 29일 (토) 11시 인천대공원



이러한 순기능을 가진 국민연금은 2007년 노무현 정권 시절 구조 개혁을 단행했다. 기금 고갈을 이유로 급여수준을 60%에서 40%로 1/3이나 삭감하고, 수급연령을 2033년까지 65세로 늦추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대신 노후 보장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했는데,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 5%에서 10%로 확대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급여율은 법안에서 정해진 대로 차곡차곡 삭감되었던 반면, 기초노령연금은 5%에 정채되어

있었다. 게다가 5년에 한 번씩 발표되는 국민연금 추계가 올 3월에 발표되면서 다시 한 번 기금고갈을 빌미로 9월 국회에 개악이 예상되는 바, 국민연금지부 조합원 뿐 아니라 노조, 정당, 단체 등 지역 사회운동진영이 국민연금 개악저지 투쟁에 함께 할 것을 결의하며 행사를 마쳤다.

〈국민연금 오해와 진실〉 참가자 한 줄 소감

국민연금지부 경인지회 공민규 본부장

저는 넘 즐거운 교육이었고, 시간상 국민 연금을 다 알릴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연대 조합원 동지들께 오해를 풀 수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금속노조 동광기연지회 김관준 사무장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가 100% 해소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른 보험에 비하면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고 앞으로 많은 선전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김지희

연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들을 연금 공단 조합원 분들이 하나하나 설명해주셔서 이해도 잘 되고 연금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어요!

국민연금지부 경인지회 민원준 조직국장

노동자로부터 시작되는 연금제도투쟁의 시발점이 되는 토론과 모임 그리고 강의였기를...

학교비정규직본부 권형은 조직국장

국민연금의 진실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노후 보장 지식보다 연금!

국민연금지부 부평계양분회 김선주 지부장

연금의 진실에 대해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고 연금투쟁 함께 해요!

민주노총 인천본부 김창곤 사무처장

정년 퇴임하신 어느 선배님의 말씀입니다. “회사다닐 때 그까짓거 국민연금 별로 신경 안썼는데 회사를 나와보니 소중한거를 알겠더라.” 하더이다.

사회진보연대 배병근 조직국장

별이가 변변치 않아 국민연금 납부예외 상태를 한동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크숍을 참가하고 나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나이 서른 되기 전에 노후 대비를 시작해야겠다고. 납부재계 신청하러 갑니다~^^

국민연금지부 부평계양분회 서민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었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오해를 풀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국민연금지부 서인천분회 오지은

오해는 풀리고 신뢰는 쌓이고~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유다해

국민연금 내고 싶어요!

금속노조 인천지부 이대우 수석부지부장

2차 뒤풀이까지 빠방한 참석! 교육이 좋았던걸까~

국민연금지부 부평계양분회 이상섭 사무장

거의 전화로만 상담하던 내용들을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면서 긍정의 에너지를 많이 얻은 듯 합니다. 앞으로 연금관련 오해를 설명할 때 더 적극적이고 살아있는 상담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학교비정규직본부 이성화

막연히 노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라며 매달 불입하는 연금 보험료가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듯이 이 돈의 쓰임새가 궁금했고, 과연 이삼십년 뒤에는 연금이 부족해 받을 것이 없을까봐 걱정했습니다. 연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이인화 본부장

제겐 많이 소중한 국민연금에 대해 인천 지역에서 처음 진행한 워크숍! 의미가 남달랐고 특히나 연금의 조합원들과 같이해서 기뻐합니다 ^^

진보신당 인천시당 이애향 사무처장

조합원의 입을 통해 직접 듣는 국민연금의 오해와 진실... 지역 주민들이 들으면 정말 좋겠는디...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한번씩만 자리 마련합시다용!

학교비정규직본부 이해영 부지부장

국민연금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었는데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어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이재영

국민연금에 대해 거의 몰랐는데 진실과 오해를 풀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국민연금지부 서인천분회 조진석 사무장

민원 외 일반인들의 연금에 대한 인식 및 생각을 접하고 국민연금공단 밖에서 연금을 생각해본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노위 인천지역위 조혜연

나쁘게만 생각했던 국민연금, 확산탄파위에 투자한다고 하니 더 화나지만 그럴수록 더 많이 관심 가져서 제대로 된 국민연금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네요! 국민연금지부 파이팅!

학교비정규직본부 정현순 동부지회장

금속노조 동관기연지회 최영진

국민연금 항상 걱정 많이 했었습니다. 나중에 찾을 수 있을까 불안했어요. 하지만 교육받고선 홍보활동 하고 있어요. 유익한 정보 감사했어요.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한재영

많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해요~ 국민연금 함께 지켜요!

내가 여태껏 모르고 있는 것을 잘 해석해서 풀이를 해주셔서 감사했으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받고 싶네요~ 그리고 조합원 교육을 6월 중에 할 생각입니다. 감사님은 해석을 잘 해주신 그 분이었으면 합니다.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한종현

연금이 솔찬하셔



부평공단 근골격계질환 실태조사

- 10명 중 6명 근골격계질환 환자 의심

유다해 | 조직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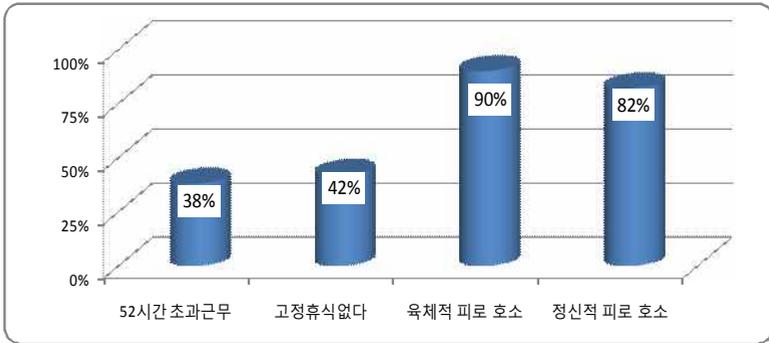
‘인천 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이하 사업단)’은 4월 2일부터 5월 9일까지 부평공단 각지에서 근골격계질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근골격계질환은 특정 신체 부위를 반복적이고 불편하게 사용해서 생기는

골병이다. 장시간 동안 일을 계속할 경우 아픈 게 당연하다는 건데, 때문에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달고 사는 병이기도 하다. 그러나 노동자가 골병에 걸리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다. 엄연히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

사업주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가 2003년 시행된지 10년이 지난 2013년 현재, 근골격계질환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감소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올 해는 특히 근골격계질환 4차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하는 해이기도 하다. 사업단은 노동조합 없는 사업장 노동자들이 근골격계질환의 증상을 겪거나 호소하는지 여부, 근골격계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직업병임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 해당 사업장에서 근골격계질환을 일으키는 유해요인(노동시간, 노동강도, 작업방법 등)의 노출유무, 사업주가 유해요인 조사를 진행하는지 여부 등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은 만만하지 않았다. 4월인데도 칼바람이 몰아치고, 퇴근하는 표정은 어찌나 무겁고 발걸음은 또 얼마나 빠르던지... 점심시간도 마찬가지였다. 밥 먹고 여유롭게 커피 한 잔 들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쁘게 뺨 지나가버리는 분들도 많았다. 이유를 물어보니 점심시간이 20분밖에 안된단다! 헉!! 뿐만 아니라 회사 이름을 적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적잖이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이 회사에서 얼마나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일하는지를 가늠케 했다.



실태조사에는 총 277명이 참여했고 평균연령은 42.5세로 30대~50대의 참여 비중이 높았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심각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는데 육체적 피로를 호소하는 노동자는 90%에 육박하고, 연장근무시간을 위반하여 52시간 초과근무하는 업체가 38%에 달한다. 휴식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업체도 4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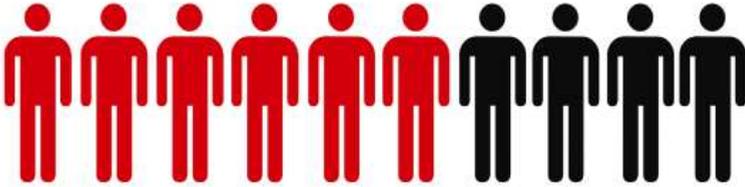
또한 '반복작업, 허리부담, 팔부담, 손목부담, 중량물취급'등 근골격계질환 부담 작업으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가 많았다.

통증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97%,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가 제시하는 근골격계질환 환자일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는 57%로 나타났다. 이는 작업 환경에 대한 신속한 개선 및 면밀한 의학적 검진이 요구되는 노동자이다.

근골격계질환 예방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체는 단 5%밖에 되지 않았고, 근골격계질환이 직업병임을 알고 있는 노동자는 31%밖에 되지 않았다.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 기준
근골격계질환 환자 의심

10명 중 6명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해야하는 사업주의 의무가 시행된 지 10년이나 지났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나 영세한 사업장은 여전히 사업주의 예방 의무가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현실임을 알 수 있었다.

사업단은 노동조합 없는 사업장과 영세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근골격계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부평공단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 이해 및 예방과 관련한 교육,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노동부의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발표회, 토론회 등을 개최 할 예정이다.

인천 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은?

2012년 기업지부 지역지부 공동위원회 사업의 일환으로 금속노조와 지역 진보정당, 사회단체가 함께 공단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결성했습니다. 2012년 무허가불법파견업체 적발, 휴업수당 실태조사로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현실을 이슈화시켰고, 2013년에는 근골격계 실태조사, 이주노동자 조직화 선전전, 청천농장 사업으로 의제를 확장하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에 바란다.

- 전국건설노동조합 인천건설지부 이병권 사무국장



내가 본 사회진보연대라는 글을 써달라고 했을 때 거절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 사회진보연대는 내가 건설노조 상근을 하면서 만나본 단체 중 가장 인상 깊은 단체이기 때문이다.
건성을 기원하면서..

나만 느끼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노조 상근을 하다보면 목마른 그 무엇이 있다. 대중조직인 노동조합활동은 인내를 요구하기도 하고 편협한 사고와 판단을 요구하기도 한다.

사회진보연대는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사업을 꾸준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여겨진다.

살아오면서 내게는 작은 신념이 하나있다. 始勤終怠 人之常情 原慎終如始 (시근종태 인지상정 원신종여시)'처음에 부지런하고 나중에 게으른 것이

사람의 성정이니 원컨대 나중에 삼가기를 처음과 같이 하소서' 였다.
사회진보연대 역시 그랬으면 좋겠다. 처음 단체를 결성할 때 마음처럼 늘
노동자 민중을 위한 마음 그대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와 함께하는 동지들을 보면서, 지역의 의제를 발굴
하고 노력하는 동지들을 보면서 고맙기도 하였고 변치 않기를 기도해 보
기도하였다.

사무실 한번 찾아가보지도 못하고 함께 왕성한 활동도 해보지 않은 단체
이기도 하지만 언젠가 함께 할 수 있을 것 이라는 막연한 기대역시 존재
하기도 한다. 좀 더 욕심내서 이야기하자면 많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
으면 한다.

사회진보연대를 처음 접하게 된 동기도 교육프로그램이다. 듣고 싶었던
내용이 있어서 꼭! 시간 내서 들으려고 하였던 기억이 있다. 대중조직에
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을 잘 발굴해서 교육사업을 진행했으면 한다.

많은 부분을 놓치고 갔기 때문이겠지만 특히 민주노총이 많이 어렵고 힘
든 것은 교육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탓이 상당히 있다. 민주노총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지역이나 단체에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서 해결
해야 한다는 소망이 있다.

다시 한 번 폭넓은 사업! 노동자중심의 사업! 특히 비정규 노동자를 위한
사업이 원숙하게 진행되기를 기원한다. 건승을 빕니다.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는



자본주의의 심각한 위기에 대한 '대안'을 고민합니다.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 스스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연대합니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 할 수 있도록 활동합니다.

이 사회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지식이 민중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교육사업을 진행합니다.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인천지역의 문제를 조사, 연구합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고, 여성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싸웁니다.

국적과 인종을 이유로 차별당하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웁니다.

이 모든 일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회원이 되어 주세요.

회원가입 신청

이름 _____ 후원회원 정회원
은행명 _____
은행계좌번호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약정금액 _____
이메일 _____
연락처 _____
주소 _____
가입동기 _____